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한 시도의회의장들이 진영 장관과 맞손을 잡고 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연수기관 설립 해달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진영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서 건의 진영 장관 “행안부 추진 현안 중에 법안 국회 의결 중요 해결위해 국회 찾아다니며 최선...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의결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송 의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국회의 정년수령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사무처 직원,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연수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지방의회 6기에만 1만4847건의 교육연수가 이뤄졌지만 68%가 일회성 간담회”라며 “3751명의 공역기초의원과 3711명의 의회 사무직원의 의정 역량강화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연계해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 지원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에 진영 행안부 장관께서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현안 중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도의회의장들께서도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의회 현안(연수기관 설립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자주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보장을 비롯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운영 자율성 확대,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확대, 인사청문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 등과 관련된 법률안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주민 배제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 출범 규탄

도의회 한빛원전특위 긴급회의... 민·관·정 대책위 필요성 공감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 출범을 규탄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정부는 연립과 성별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으나 지역주민 등이 배제된 채 구성된 위원회가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 도당 한수용 특위원장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수용 노인복지정책 특별위원장이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미래 키워드 ‘안전·행복·공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전북대 강연에서 강조 “지방자치 개정안 핵심 기관이 아닌 주민 자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혼자만 살려고 하면, 혼자서도 살 수 없다”며 “국민이 만들어 가는 공존의 공화국을 이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후 “20세기 발전국가의 키워드가 경쟁과 효율, 성장이었다면 나아가야 할 시대의 키워드는 안전·행복·공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50년에는 대한민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소멸하고, 고령 인구 비율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은 86개에 이르러 지방 소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 지역 산업위축, 일자리감소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내셔널 미니멈(국민 생활 최저선)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그러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것은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참여한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전라북도와 함께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진성 기자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가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

두고,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광역의회에 넘기는 내용을 빼제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소개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방자치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중심이고 정부의 국정 목표는 기관 차원에서 주민 자치로 바뀌는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권력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이번 강연회는 이명연 전북도위원의 대표를 맡은 자치분권포럼이 주최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스웨덴 의회 연설

“北, 완전한 핵폐기 실질적으로 보여야”

한반도 평화·비핵화 주제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에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 핵 폐기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경우, 국제사회는 즉각 제재를 해제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웨덴 의회에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남과 북에 세가지 신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북한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며 “그러나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또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과 함께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 한국이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는 세계 핵확산방지과 군축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국제적·군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과 북 국민간의 신뢰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헤어져서 대립했던 7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이어붙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차이가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은 단일 민족 국가로서 보편성에 이르는 공통의 역사가 있다.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고, 이해



스웨덴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스톡홀름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北, 국제사회 신뢰 얻을 때까지 대화 계속해야
국제사회, 즉각 제재 해제 안전 보장 응답할 것
국제사회 신뢰 회복하면 남북 공동 번영 가능”
남북 국민간 신뢰 제안... “평범한 평화 쌓아야
그것이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작 될 것”
대화 강조... “평화 지키는 건 군사력 아닌 대화
스웨덴, 새로운 미래 만든다는 신뢰로 핵 포기”

는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가 중단됐다. 남북의 도로 철도가 연결되고 있다. 접경지역의 등대에 다시 불을 밝혀 어민들이 안전하게 고기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작지만 구체적인 평화, 평범한 평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평범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작대는 사라지고 남과 북의 국민들 모두 평화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화에 대한 신뢰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며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다. 이는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또한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대화의 전제”라며 “한국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 대화만이 평화를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을 발표한 스웨덴의 핵포기 역사를 언급하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다”며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핵으로 무

장하기보다 평화적인 군축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은 스웨덴다운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웨덴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라며 “세계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통한 번영’을 선택할 것이라는 신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확산방지 활동, 최고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스웨덴은 자신의 신뢰를 실천하고 있다”며 “지금 세계는 스웨덴을 따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있다. 인류애와 평화에 앞장서고 있는 스웨덴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울러 “나는 스웨덴의 길을 믿는다”며 “한반도 역시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 국민의 훌륭한 헌은 단지 자국의 평화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평화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라며 “스웨덴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국제사회의 평화 수호자가 됐다. 고통 받는 인류를 향해 가까이 손을 내밀어온 스웨덴의 역사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겨울은 힘들었지만 이제 여름이 오고, 맑은 우리가 똑바로 걸기를 원한다”는 스웨덴 국민 시인 토마스 트란스트뢰머 시 구절을 인용하며 “한반도에 따뜻한 계절이 오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언제나 똑바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 지난 70년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스웨덴 국민께서 함께 걸어주시길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훈처, ‘따뜻한 동행’ 사업 추진

보훈대상자 전기세 감면대상 발굴·소방시설 보급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확대를 위한 ‘보훈가족과 따뜻한 동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보훈처는 ‘따뜻한 동행’ 사업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KEPSCO)와 협업을 전기요금 감면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선

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본인이나 수권자 등에 대해 전기세를 감액해주고 있다.

또 소방청과 협조해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등 안전취약

대상자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화재 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직능단체,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도 지원된다. 대한비용사회중앙회와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게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따뜻한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